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다가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제22대 국회가 달성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해당 과제는 지금 현재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꼭 달성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차별금지법」제정

2007년부터 성소수자들은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4건 발의되었지만 제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 동성결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등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2023년도 갤럽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성혼 찬성률이 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고, 5월에는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의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2대 국회는 누구나 성별에 상관없이 혼인하고, 혼인 외 가구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군형법」92조의6 폐지

동성 간의 항문성교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동성애 처벌법입니다.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5:4로 합헌 결정을 했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하는 이 법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악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4.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 내부지침인 예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법원에서는 여전히 생식능력제거와 외부성기수술 등 신체 침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의료적 조치 없이 성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이 발의 시도되었으나,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자신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를 포함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

HIV가 1980년대 처음 발견된 이래 수십 년 간 다양한 치료법의 발견으로 HIV/AIDS는 관리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낡은 혐오와 공포에 기반한 법률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IV 감염인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입니다.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다수인 5명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HIV 감염인의 인권 보장,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교육 환경 및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에서 교사 또는 다른 학생들로부터 여러 차별과 혐오, 폭력을 마주합니다. 성소수자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과 환경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럼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폐지 시도가 이루어지는 등 법과 제도는 청소년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섹슈얼리티 및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7.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 개선

2023년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축제 개최를 방해하고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승인으로 광장이 아닌 을지로에서 개최되어야 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성소수자에게만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 이제는 국회가 바뀌어내야 합니다.

8.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 진행

한국에 몇 명의 성소수자가 있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 및 각 정부부처에 성소수자 실태 조사를 권고했지만 모두 불수용되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겠죠. 인구총조사와 각 정부 실태조사에서 성소수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9.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금지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는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강제로 변경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시도로, 그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의학적 치료’도 아니고, 정체성을 ‘전환’시키지도 못합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전환치료 금지를 정부에 권고했고,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누가 강제로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치료 금지, 이제는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10.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

헌법은 제20조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과 결탁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동조하고 심지어 법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켜야 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 인식에 기반한 편협한 논리가 아니라, 평등과 존엄이라는 보편적 인권 가치가 아닐까요. 제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없기를 요구합니다.